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6일 (음력 1월 22일) 화요일

전남도·나주시, 한전공대 지원 시동 걸었다



한전 공과대학(일명 캠퍼스·Kepoo Tech) 설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될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25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전담조직 구성에 위한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전남도의 한전공대설립지원단 규모는 '총괄기획·기획협력·개발지원' 등 3개 팀에 나주시의 '행정지원팀'을 더해 총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한전공대설립지원단에 과장급

(지방서기관) 지원단장 1명을 비롯해 팀장급 3명, 행정·토목·도시계획·건축·시설 분야 담당자 6명 등 총 10명을 발령 냈다.

전남도는 이날 꾸려진 설립지원단을 당장 시급한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우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에 정식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인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본정 내에 정식 조직조직인 '과(課)'급으로 격상 시킬 방침이다.

나주시도 '행정지원팀' 업무를 지원할 5명을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에 파견키

로 결정하고, 2월 말 내로 우선 팀장급(5급 사무관) 1명을 비롯해 총 4명을 지원단에 먼저 합류 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1명은 오는 4월까지 파견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업무 분장은 전남도가 총괄업무와 건축·토목·시설 분야를 맡고, 나주시가 행정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지원단 인적 구성에 발맞춰 한전 측의 '한전공대 설립지원 TF'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전 내 공대설립지원단의 전체 인적 규모는 단장을 포함해 31명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지자체 설립지원단과 실무 협의에 나선 TF는 5명 수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설립지원단 인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월말 내로 한전 측과 공대 설립 재정지원 이행 협의를 위한 첫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지자체 설립지원단과 한전 측 TF는 상견례 이후 수차례 만나 공대설립 부지 제공과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전담조직 인적구성 완료

전남도 조직개편 통해 오는 4월께 정식 조직화

한전내 지원단 2월말 지자체와 첫 상견례 예정

로 결정하고, 2월 말 내로 우선 팀장급(5급 사무관) 1명을 비롯해 총 4명을 지원단에 먼저 합류 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1명은 오는 4월까지 파견을 완료할 예정이다.

실시협약 안에는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인·허가 추진계획', '행정지원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실시 협약 이후에 오는 3월말까지 전문 용역사 'A.T.Kearney'(A.T커니)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 용역 결과물을 보고 받는다.

최종 용역 보고서에는 '학교·교과 체계', '캠퍼스 건축 방향'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용역사의 최종 보고서 제작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체 추진 계획을 반영한 '미스터풀랜'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2월까지는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돼야 상반기 내에 캠퍼스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특혜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국회 의원이(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석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앞서 조수석은 전날(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국회의원등
은 제외할 수
도...



그럼 국회의
원 특혜처가
되는 거지



오죽 하
면...

"고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해야"…동문들 후원회 발족

전남대의대 동창회 추모사업 추진
기금 모금 활발…윤한덕상 제정도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모교인 전남대의대 동창회를 중심으로 후원회가 꾸려져 다양한 추모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양한모 전남대의대 동창회장은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응급의료 분야의 의인인 고 윤한덕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동문들이 후원회를 발족하고 윤한덕상 제정과 기금 모금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대의대 동창회는 지난 15일 9명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발족하고 동창회 신하여 '고 윤한덕 추모사업 TF팀(팀장 서혜연 원장)'을 가동했다.

후원회는 기금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발족 1주일 만에 1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여기에는 서울과 광주, 목포, 여수 등 전국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후원회는 또 그를 기리는 윤한덕상을 제정해 개교기념일 등에 시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 회장은 "평생을 국내 응급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 해 가족들의 생계도 힘든 형편이다"며 "그를 기억하는 동문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후원회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 윤 센터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가 생긴 지난 1994년 '1호 전공의'로 자원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다. 이후 2002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창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자리리를 옮겼으며 2012년 7월 센터장으로 취임한 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과 응

급의료기관 체계 정립,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설 연휴도 잊고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 행정동 2층 중앙응급의료센터장실에서 순직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윤 센터장의 헌신적인 삶을 기려,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리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치고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리는 청원이 있다.

윤 센터장의 죽음은 독립투사나 군인, 소방관처럼 공공의 가치를 수호하다 죽음을 맞이한 분들과 동등하다며 훈장 추서나 동상 설립을 요청하는 글도 게시됐다.

허탁 전남대 의대 교수는 칼럼을 통해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일생을 독립투사처럼 살아왔다"며 "주위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희생한 그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들에게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